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부가세 세정지원 소상공인... 법인세 · 소득세 신고도 3개월 납부연장

국세청이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한 번에 통합 제공하는 세정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때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대상(128.0만건)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5.2만건), 5월 소득세 신고(66.7만건)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혜택을 받는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단축해서 지급한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기준으로 23만건을 지원했으며, 3월 법인세 신고에서는 1만7천건을 지원할 전망이다.

정기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전년대비 10~20% 이상 투자를 확대한 수출기업에 지원했다면, 올해는 전년대비 5~15% 이상만 투자해도 세무검증에서 제외해주는 식으로 내부 기준을 바꾼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정지원 및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6.1조원 지급...지급대 상 약 80만 가구 늘어날 듯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총 6.1조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4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에 약 47만 가구, 주택공시가격 하락으로 약 32만 가구가 올해 장려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자녀장려금 가구 소득기준은 연 소득 4000만원 미

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소득 외에도 전세금을 합쳐 총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함에 따라 장려금 지급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이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 국세청, 소재 · 부품 · 장비 및 뿌리산업 1만2천개 신고검증 제외

국세청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1만2천개를 추가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대기업 납품 회사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상 기업은 세금신고 검증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보강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11만5천개에서 12만7천개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미래분야 및 수출 중소기업에 한정하던 것을 뿌리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등 대기업 납품회사에까지 확대하기 위함이다.

뿌리산업은 산업용 로봇, 주조, 금형, 열처리, 정밀가공 등 국내 제조업 중간재 회사들을 말한다.

지난해 중소 주류제조업체들이 대형 주류업체 수출망에 끼워서 수출했던 것에서 나아가 직접 해외 주류매장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막걸리 첨가물 제한, 창고면적기준 완화, 주류운반스티커 부착의무 등 주류업계 민원을 해결한다.

기업주 자녀가 적은 부담으로 부모의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가업승계 컨설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처리대상에 벤처기업 인증, 신성장·원천기술 심사를 추가하고, 정부지원과제 등 간단한 심사는 지방국세청에서 전담으로 처리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관련 신청접수부터 결과통지까지 업무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한다.